

# 산재사고 양형 기준 높였는데...현장 체감도는 '미지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달 앞두고 사업주·노동청 등 인식 높이지 못미쳐 사업주 안전 소극적 투자·법원 솜방망이 처벌...산업재해 끊이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한 산업현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이지만 사업주를 비롯, 법원·노동청 등의 인식은 지역사회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범위를 대폭 높인 뒤에도 법원 판결로는 별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안전에 대한 투자 등에 소극적인 사업주들로 인해 산업재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다.

◇대법원이 산업재해 사건 권고형량 높였는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노동청과 사회적 인식을 반영, 양형 기준을 상향시켰지만 실제 판결 결과는 기존과 별 차이가 없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억제력이 제대로 작용할 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30일 법조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3월 확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은 지난 7월 이후 재판에 넘

겨진 사건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양형위원회는 노동자가 사망한 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양형기준을 기본 6개월~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2년 6개월로 상향했다. 또 여러 명의 노동자가 다치거나 숨진 경우, 5년 이내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포함해 최대 징역 10년 6개월형까지 처벌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기준 적용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게 노동계 시각이다.

지난 7월 22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곡성 지중화공사장 현장소장 A(42)씨와 굴착기 기사 B(42)씨에 대한 형량은 벌금형에 머물렀다.

재판부는 굴착기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감리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A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굴착기 기사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사를 맡은 회사에게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개월, B

씨에게 금고 6개월,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800만원을 구형했다.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이 반영됐다.

지난 8월 17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물 외벽도장공사(도금액 800만원)를 맡았던 사업주 C(63)씨는 같은 날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C씨는 안전 난간 또는 추락 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건물 4층 옥상에서 외벽도장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초범으로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같은 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 이사 D(60)씨와 회사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각각 징역 4개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D씨는 17억원짜리 나누지역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외부 창호 작업을 진행하다 안전대 및 구명줄 설치 등의 조치를 소홀히해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두 산업현장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로 이어졌지만 두 사건의 경우 검찰의 구형량, 법원 선고형량 모두 새로운 양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권오산 광주·전남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산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양형은 언론 등이 쏟아지는 사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산업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노동자 사망 사고와 중대 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인식에 법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시각이 감지된다.

민변 소속 변호사는 "산업현장 내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반면, 법원 판결은 강화된 양형기준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강화되면서 사업주들의 합의 시도가 많아졌다는 반응도 보인다. 박철 변호사는 "산안법 판결의 경우 피해자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피해자들이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서를 내 법원에서 선처의 근거가 생긴다"고 말했다.

◇줄기는 커녕 늘어난 산업재해-산업재해 사고는 전년도에 견줘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1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들어 지난 9월까지 광주노동청 관할지역 내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 요양자는 1만 671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9586명)보다 1000여명 늘어났다.

산업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께 장성군 대양그늘 계열사인 대양판지(주)장성공장에서는 작업 설비에 노동자가 끼어 중상을 입었다.

피해 노동자는 가동중인 기계가 멈춰서자 멈춰진 기계사이에 들어갔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예전에 사고 위험성을 들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150권이 넘는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해 고발했지만 조사가 늦어지면서 사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노동청은 자신들이 위촉한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고발에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조사를 미루다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또 1일 오전 11시께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한 부두에서도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선박용 컨테이너 고정 구조물을 제작하던 노동자 2명이 작업을 하다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11m 아래 바닥으로 추락, 한 명이 숨지고 베트남 국적 노동자(43)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수천억대 통상임금·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선고 앞두고

### 금호타이어 흑독한 겨울 맞이하나

수천억원에 이르는 통상임금 소송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선고가 다가오면서 금호타이어의 흑독한 겨울나기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원자재값 상승, 물류와 반도체난으로 빚어지는 생산 차질 문제에다, 소송으로 인한 불투명한 경영 상황까지 맞물려 소송 결과에 따라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역 경제계에서 흘러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 2부는 오는 8일 오후 A씨 등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노동자들 334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1심은 회사측이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고 임금 차액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해당 소송 규모는 171억원에 이른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A씨 등의 사건 외에도 같은 취지로 1심에서 진행했던 7개 재판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계획하고 있다. 이들 재판에 참여한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노동자들만 730명에 달하고 전체 소송 규모도 374억원 수준이다. 1심은 대부분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실상 금호타이어의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는 게 1심 법원 판단이었다.

광주고법 민사 3부(부장판사 이창한)가 진

행하는 통상임금 소송은 금호타이어 노사뿐 아니라 지역 경제계까지 주목하는 재판이다. 대법원은 앞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信義則·신뢰)을 저버리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권리 행사를 해서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한 엄격한 시각을 드러내면서 직원들이 청구한 미지급수당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파기환송심이지만 회사측은 '기업 존립이 위태롭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절박하게 소송에 임하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애초 1일 예정됐던 재판이 내년으로 넘어가 1월 26일로 바뀌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회사측은 앞선 재판에서 오는 2023년 말 1조원대 대규모 부채 만기가 도래하는데, 소송에 따라 3000여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에게 미지급 통상임금으로 예상되는 2133억을 지급하게 되면 자칫 지급불능(디폴트) 사태에 이르게 될 수 있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제시하는가 하면, 회계 감정을 신청하는 등 절박한 입장을 호소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들어 노조측의 부정적 입장에도, "코로나 등 상황이 바뀌긴 했다"며 감정을 진행키로 하고 감정기관을 선정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수능 후 청소년 탈선 예방해야죠”

1일 광주 북구청 여성가족과 사무실에서 청소년팀 직원들이 수능 후 청소년들의 지도와 교육 차원에서 유흥시설에 배부할 청소년보호법위반 안내 스티커를 확인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돈 값아라’ 독촉에 사귀던 여성 살해 40대 징역 28년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다 사귀던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8년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살인고 사체는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전북 남원시에 위치한 자신의 외할아버지 묘 인근으로 사귀던 여성(45)을 데리고 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 모친에게 2700만원을 빌린 뒤 값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변제 독촉을 받던 중 말다툼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해놓고 피해자 딸과 아들에게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서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A씨가 사건에 계획하고 살해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